

면세유 실수요자에 배정된다

앞으로 면세유의 연간공급한도량이 사유규모와 작목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또한 미사용 면세유를 회수, 곧바로 필요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 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업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가별 유종별 연간공급량 배정시 난방용의 경우 사유규모나 작목 등에 따른 수요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배정토록 했다.

난방용 면세유류를 시설하우스나 보유 난방기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 영농형태에 따른 수요량 반영이 곤란했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난방용 면세유가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농축산인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전수배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조합별 면세유의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 지역별 영농 및 재배형태 등을 반영하여 배정비율을 차등 적용, 재배품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석유제품의 과잉·부족현상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농축산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의 사용 잔량을 일정시점을 정해 회수, 조합유보량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농가에 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합별 유보량이 적다보니 영농규모가 커서 당초 배정량보다 추가적인 면세유류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해 적기 배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면 연말에는 농가별 배정량 중 사용하지 못한 면세유류가 상당량에 달하는 문제점이 반복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미사용돼 소멸되는 면세유류를 필요농가 등에 적기에 배정, 면세유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산 대규모 행사 원칙적으로 취소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로 인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국내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질병의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축산 관련 대규모 행사 시 신종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7일 축산정책관 주재 하에 검역원,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마사회 및 축산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부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가 개최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사람 간, 사람으로부터 가축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대규모 행사는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규모 축소와 함께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 후 개최하기로 했다. 축산 관련 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작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감염예방 편람'을 기본으로 해 방역에 필요한 현장 조치 사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장 입구에 열감지기 또는 에어 샤워기(Air-shower)나 발판소독조 등과 함께 체온 측정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체온 측정소에는 발열 상담자를 배치해야 하며, 항균 마스크를 구비하도록 했다.

행사장 내에 의무실을 상시 운영하고 의료진이 주재하도록 했으며, 화장실 및 주요 시설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가축은 전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전시할 경우 펜스를 설치하고 전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도록 했다. 행사 주관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사 전에 행사내용을 통지하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는 한편,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감염예방 편람'을 준수토록 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신종 인플루엔자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참가자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간척지내 조성사업' 추진 힘 얻어

축산단지에서의 가축질병 발생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간척지에 축산단지(낙농단지)를 조성,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한EU FTA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자원순환형 축산단지(낙농단지)를 청정지역인 간척지에 조성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간척지에 축산단지를 조성할 경우 가축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축산단지 조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축산단지에서 가축질병 발생 사례가 적어 방역 체계 확립에 오히려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가축질병 발생현황을 보면 구제역의 경우 경기 용인 소재 옥산단지에서 발생했지만 돈열의 경우는 축산단지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대부분의 축산단지는 현대식 축사 및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치즈시장, 수입산에 잠식

국내 잉여원유의 소진을 위해 용도별차등가격제 등을 통한 치즈용 공급원유 단가를 낮추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통계연감에 따르면 2008년 자연치즈 공급량은 5만3429톤으로 이중 수입치즈가 4만3727톤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가공치즈 공급량 1만8974톤 중에서는 국내생산이 1만5314톤으로 국내산 치즈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물량에서 수입치즈는 국내치즈시장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치즈와 버터 등 유가공제품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이 국내 잉여원유의 소진방법의 하나로 제안되고 있으나 치즈시장만을 놓고 볼 때 잉여원유 소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원유가격이 비싸 100% 국산 원유로만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며 “일부 국내 제품으로 공급되는 가공치즈 중에서도 저렴한 수입 자연치즈를 다시 가공해 만드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잉여원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즈

용 공급원유의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일반 원유가가 리터당 850원 가량이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이용할 경우 유업체는 치즈가공용 원유를 국제거래가격으로 리터당 약 420원에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가격대도 수입치즈에 비해 여전히 단가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김민형 유가협회 차장은 “치즈 1kg를 만드는데 원유가 10kg정도가 필요하다”며 “치즈제품을 통해 잉여원유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업체가 치즈용 원유를 마련할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방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大통령 “농협 구조개편 차질없게” 특명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 구조개편(신용과 경제사업 분리)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것을 주문해 최근 지사부진했던 농협 신경분리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저녁 경남 통영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이 대통령이 농협 개혁을 특별히 강조하며 ‘농민의 농협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장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원도 홍천군 농촌현장 찾기를 수행했다.

장 장관은 “농협이 덩치가 워낙 커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방향을 잡았다”며 “다음주 1박 2일간 끝장토론을 한 뒤 조속히 (신경분리에 관한) 농협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농정 현안으로 * 농협 구조개편 *2020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 *농어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과제 등 네 가지를 제시하며 구조개편을 통한 농협 개혁을 첫손에 꼽았다.

올해 대풍이 예상돼 쌀값 폭락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장 장관은 “농협 수탁 물량을 대폭 확대해 농민들이 풍년 걱정을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농협이 추수한 쌀을 농민으로부터 사들여 쌀값 7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수탁제는 그동안 처리 물량이 10%에도 못 미쳤지만 정부가 앞장서 올해 이를 70~8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일부 지역의

조합장 반발이 예상되지만 뛰어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 장관은 "쌀값 안정을 위해) 국내 수급이 잘 되도록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2~3년 안에 가공식품쪽 쌀 소비를 20만톤 가량 늘리면 쌀 수급에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가 잘되면"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낙농 제도개선’ 협동조합 중심으로

“낙농 제도개선은 전국 단위 쿼터제 도입과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 일원화가 핵심입니다.”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회장 박철용·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장)는 9월 11일 대전에서 2009년 제5차 협의회를 열고 낙농발전대책 수립 추진동향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실무협의회와 낙농육우협회·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FTA 특별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을 듣고 “낙농 제도개선은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중훈 농협중앙회 낙농팀장은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FTA 특위 실무협의 결과 “제도개선 방향을 전국 단위 단일 쿼터제 도입과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에 두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에서는 FTA 대책으로 △학교·군 우유급식 확대 등 소비기반 확대 대책 마련 △시설 현대화자금 보조 확대 및 유가공 시설자금 지원 등 낙농기반 유지 대책 △가공원료유 지원은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전제로 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정부의 제도개선 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중호 백제낙협 조합장과 신관우 충북낙협 조합장 등은 또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안이 나오기 이전에 협의회 의사를 정부에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철용 협의회장은 “정부가 낙농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제시 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농식품부가 안을 마련하더라도 낙농조합장협의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는 등 충분히 토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조직개편 칼 들었다

농촌진흥청이 9월 7일 실용화 재단 출범을 계기로 부장급 이상 전원 사표를 제출받는 등 조직개혁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9월 7일 실용화재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김재수 청장은 “이번 실용화재단 출범을 계기로 청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변화시켜야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그 이유로 “아직도 외부에서는 청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비장한 심경을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조은기 농업과학원장이 실용화재단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른 공석을 메우고 그동안 업적 평가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표를 제출한 19명의 간부직에 대해 그동안 연구성과와 업무추진실적, 외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표수리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는 것.

또 과장급은 이미 시행한 전반기 업무평가를 토대로 하위 20%에 대해 서면경고조치를 했고 하반기 평가결과에서 연속적으로 하위등급에 포함될 경우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 내부적으로는 “이수화, 김인식 등 전임 청장 시절 수 많은 조직개편과 보직이동, 지도직과 연구직 순환보직 등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또다시 기능개편과 조직개혁이 시작되고 있다”며 “농진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기관인 만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처질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일부 청 직원들은 “개혁이란 이름의 지나치게 빈번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어 이제는 어느 자리에 보직을 받아도 아예 길어야 1년짜리 보직이란 생각뿐”이라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하락을 우려했다.

축사 400㎡ 이하 농가 직접설계 가능

일정규모 이하의 축사는 전문건축사 설계 없이 농가가 직접 설계해도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축사건축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농협은 건축법의 축사관련 규제 내용이 너무 과도해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수차례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는 이를 농업·농촌 숙원사항에 포함, 농정활동을 벌여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약 120평) 이하인 축사의 경우 건축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해당 규모의 축사를 지어 지자체에 신고할 때 건축사 설계도를 반드시 첨부토록 규정된 조항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보통 400㎡ 규모의 축사 설계도를 건축사에 맡기면 5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바닥면적 합계가 5,000㎡(약 1,500평) 이상인 건축물은 감리자가 공사기간 내내 상주해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축사인 경우엔 비상주 감리를 허용했다. 5,000㎡ 규모의 축사를 짓는 동안 감리자 상주에 따른 비용은 1,700만원가량 드는 실정이다.

연면적 합계 1,000㎡(약 303평)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물 안전 및 지진 등에 대해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축사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할 경우 이를 면제토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이밖에 연면적 합계 2,000㎡(606평)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축사는 해당사항에서 제외했으며, 축사 처마길이(돌출차양)의 3m 이하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민석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축사건축 담당자는 "이번 완화조치로 축산농가들은 축사 건축에 따른 각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약해 축사부지 확보를 못해 겪었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유가격 올라도 소비량 늘었다

우유 소비자가격이 오름에 따라 가격저항으로 소비량이 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올해 상반기 원유소비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아와 박태환 등 '스타마케팅'의 효과와 발효유 신제품 개발 등이 특특히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원유수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9년 상반기 중 시유와 유제품 등에 사용된 원유량은 일평균 5177톤으로 전년 동기 사용량인 5111톤에 비해 1.3%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원유 공급가 인상에 따라 우유와 발효유 제품 가격이 평균 18%이상 오르면서 우유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격 저항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 셈. 업계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와 박태환 등 신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이 호평받으며 시유소비가 전혀 줄지 않은 것과 발효유 시장의 확대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백색시유에 경우 일시적인 소비감소 이후 업계가 예상하는 기간보다 훨씬 빨리 소비세를 회복, 정상궤도에 올라 오히려 오른 가격을 반영하며 매출증가를 가져왔고 백색시유용 원유 소비량은 전년과 비교해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특히 원유소비량이 늘어난데 큰 역할을 한 발효유시장의 확대로 매일의 '퓨어', 남양의 '떠먹는 불가리스', 서울우유의 '요하임' 등이 인기를 끌면서 발효유용 원유소비가 많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원유소비량이 늘어난 반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젖소 사육마릿수 감소와 마리당 산유량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09년 상반기 전국 원유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잉여량도 전년동기 대비 26.8%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